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김하중
발간등록번호 31-9735026-001271-14
www.nars.go.kr

지표로 보는 이슈
제136호 2019년 4월 22일

최근 20년간 총국민소득 대비 가계 및 기업소득 비중 추이와 시사점

배경

- **우리나라의 1인당 총국민소득이 2018년 3만 달러를 넘어섰으나, 일반 국민들은 이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최근 20년간 우리나라 총국민소득 대비 가계 및 기업소득 비중 추이와 현황 등을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주요내용

- **최근 20년간 우리나라의 총국민소득에서 가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8년 72.8%에서 2017년 61.3%로 11.5%p 줄어든 반면, 기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8년 13.9%에서 2017년 24.5%로 10.6%p 증가하였음**
  - 가계와 기업이 실제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인 총조정처분가능소득에서 가계가 차지하는 비중의 경우 1998년 73.9%에서 2017년 64.2%로 9.7%p 줄어든 반면,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10.5%에서 20.2%로 9.7%p 증가하였음
- **총국민소득에서 가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기업소득의 비중이 높아진 것은 1998~2017년 기간 중 가계소득의 증가 보다 기업소득의 증가가 더 빨랐기 때문임**
  - 1998~2017년 기간 중 총국민소득(명목금액 기준)은 연평균 6.6% 증가하였으나, 이 기간 동안 가계 소득은 연평균 5.6% 증가한 반면 기업소득은 연평균 9.8%의 증가율을 보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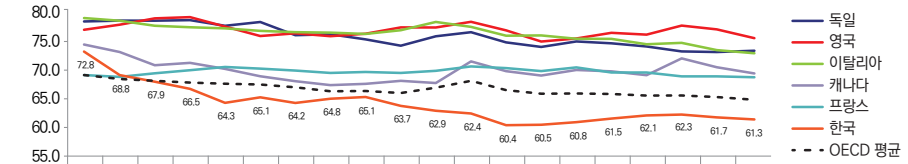
시사점

- **1인당 총국민소득 3만불 체감을 위해서는 가계 소득을 구성하는 피용자보수(임금), 자영업자의 영업이익, 재산소득 등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으며, 기업소득의 가계환류와 가계의 안정적 소득 증대를 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상황 개선, 영세자영업자의 이익개선 등을 위해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가계가 실제 처분할 수 있는 조정처분가능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 및 의료서비스 등의 복지제도 확충 등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정책방안도 함께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최근 OECD, IMF 등에서 세계경제성장율을 계속적으로 하향조정하고, 무역여건 악화에 따른 우리나라 수출의 둔화우려 등을 감안할 때, 한국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수출뿐만 아니라 내수경기의 활성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가계소득 증가가 소비지출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각종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김 민 창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경제학박사)
02-788-4571, mckim0824@assembly.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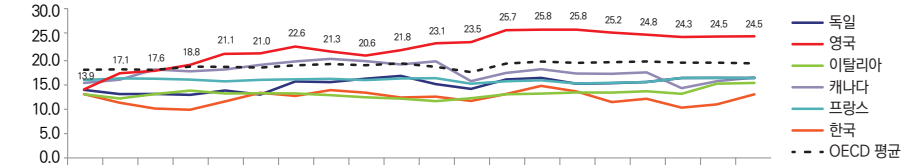
총국민소득(GNI) 대비 가계 및 기업소득 비중 추이

〈 총국민소득(GNI) 대비 가계소득 비중 추이 〉 (단위: %)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한국	72.8	68.8	67.9	66.5	64.3	65.1	64.2	64.8	65.1	63.7	62.9	62.4	60.4	60.5	60.8	61.5	62.1	62.3	61.7	61.3
OECD 평균	68.8	68.2	67.9	67.7	67.4	67.3	66.7	66.2	66.1	65.8	66.7	67.9	66.3	65.7	65.9	65.6	65.4	65.4	65.2	64.6

〈 총국민소득(GNI) 대비 기업소득 비중 추이 〉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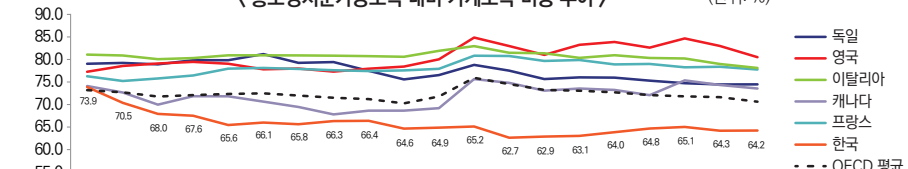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한국	13.9	17.1	17.6	18.8	21.1	21.0	22.6	21.3	20.6	21.8	23.1	23.5	25.7	25.8	25.8	25.2	24.8	24.3	24.5	24.5
OECD 평균	17.7	17.9	17.8	18.4	18.3	18.2	18.7	19.0	18.7	19.1	18.3	17.3	19.1	19.5	19.1	19.3	19.4	19.2	19.2	19.1

주: OECD 평균은 1998~2017년까지 자료입수가 가능한 OECD 24개 국가(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벨기에, 스웨덴,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캐나다,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한국, 헝가리)
자료: OECD National Accounts Statistics(https://data.oecd.org)

- **총국민소득 중 가계/기업의 소득 비중은 가계, 기업의 각 부문이 생산과정에 참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얻은 소득(피용자보수(임금), 영업잉여, 재산소득 등)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우리나라의 총국민소득(GNI) 대비 가계소득 비중은 1998년 72.8%로 OECD 평균(68.8%)보다 4%p 높은 수준이었으나, 점차 낮아져 2017년에는 61.3% 수준임**
  - 1998~2017년 기간 중 OECD 24개국 평균 총국민소득 대비 가계소득 비중은 68.8% → 64.6%로 4.2%p 감소한 반면, 우리나라는 11.5%p 줄어들었음
- **한편, 우리나라의 총국민소득에서 기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8년 13.9%로 OECD 평균(17.7%)보다 3.8%p 낮았으나,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에는 24.5%로 높아졌음**
  - 1998~2017년 기간 중 OECD 24개국 평균 총국민소득 대비 기업소득 비중은 17.7% → 19.1%로 1.4%p 증가하는데 그쳤으나, 우리나라는 10.6%p 증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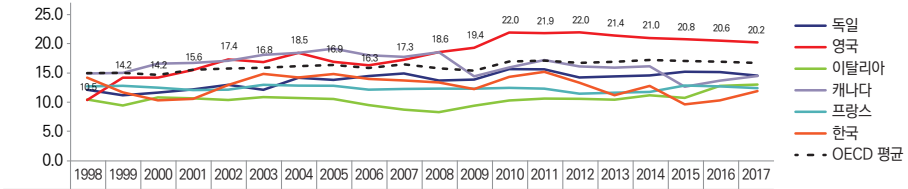
총조정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 및 기업소득 비중 추이

〈 총조정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소득 비중 추이 〉 (단위: %)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한국	73.9	70.5	68.0	67.6	65.6	66.1	65.8	66.3	66.4	64.6	64.9	65.2	62.7	62.9	63.1	64.0	64.8	65.1	64.3	64.2
OECD 평균	73.3	72.9	71.8	72.1	72.5	72.7	72.1	71.6	71.3	70.3	71.9	76.0	74.4	73.3	73.2	72.7	72.1	71.9	71.7	70.7

〈 총조정처분가능소득 대비 기업소득 비중 추이 〉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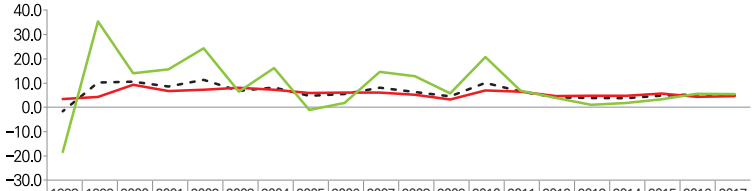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한국	10.5	14.2	14.2	15.6	17.4	16.8	18.5	16.9	16.3	17.3	18.6	19.4	22.0	21.9	22.0	21.4	21.0	20.8	20.6	20.2
OECD 평균	15.1	15.1	14.8	15.5	15.8	16.0	16.2	16.4	15.9	16.5	15.8	15.4	17.1	17.2	16.8	17.0	17.2	17.0	16.9	16.8

주: OECD 평균은 1998~2017년까지 자료입수가 가능한 OECD 24개 국가(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벨기에, 스웨덴,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캐나다,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한국, 헝가리)
자료: OECD National Accounts Statistics(https://data.oecd.org)

- **총조정처분가능소득 중 가계/기업의 소득 비중은 각 부문별로 얻은 소득에서 경상세, 순사회부담금 등을 차감하고 정부의 현물이전, 보조금 등을 더해 얻은 각 부문별 조정처분가능 소득의 비중으로, 전체 소득 중 각 부문별로 실제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의 비중을 의미하는 바, 우리나라의 총조정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소득 비중은 1998년 73.9%로 OECD 평균(73.3%)과 유사한 수준이었으나, 이후 꾸준히 감소하여 2017년에는 64.2% 수준임**
  - 1998~2017년 기간 중 OECD 24개국 평균 총조정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소득 비중은 73.3% → 70.7%로 2.6%p 줄어든 반면 우리나라는 9.7%p 감소하였음
- **한편, 우리나라의 총조정처분가능소득에서 기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8년 10.5%에서 점차 높아져 2017년에는 20.2% 수준을 보이고 있음**
  - 1998~2017년 기간 중 OECD의 평균 총조정처분가능소득 대비 기업소득 비중은 15.1% → 16.8%로 1.7%p 증가하였으나, 우리나라는 9.7%p 증가하였음

총국민소득(GNI) 및 가계/기업의 부문별 소득 증가율 추이

〈 총국민소득 및 부문별 소득 증가율 (1998~2017년) 〉 (단위: %)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총국민소득	−1.9	10.2	10.6	8.4	11.0	6.4	8.2	4.4	5.5	8.1	6.2	4.0	10.2	5.8	3.8	3.5	3.6	5.2	5.0	5.1
가계	3.1	4.2	9.1	6.2	7.2	7.8	6.7	5.4	5.9	5.7	4.9	3.2	6.7	6.1	4.4	4.6	4.5	5.5	4.1	4.4
기업	−18.2	35.7	13.8	15.6	24.5	6.1	16.2	−1.3	1.7	14.5	12.5	5.7	20.7	6.4	3.7	0.9	2.0	3.4	5.4	5.3

〈 총국민소득 및 부문별 소득의 연평균 증가율 〉 (단위: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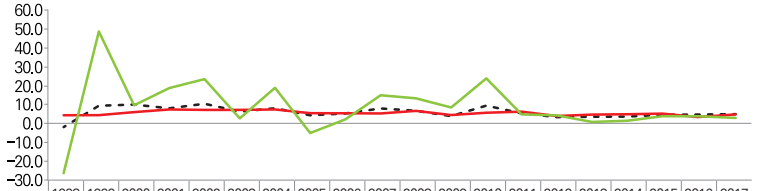
구분	1998~2017					
	1998~2007		2008~2017			
총국민소득	8.1		5.1		6.6	
가계	6.5	(−1.6)	4.8	(−0.3)	5.6	(−1.0)
기업	13.6	(5.5)	5.8	(0.7)	9.8	(3.2)

주: ()은 총국민소득 증가율과의 차이(%p), 총조정처분가능소득 및 가계/기업의 부문별 소득증가율, 연평균 증가율은 명목금액 기준임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 **1998~2017년 기간 중 총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가계소득의 비중이 줄어들고 기업소득의 비중이 높아진 것은 이 기간 중 가계소득 보다 기업소득이 더 빠르게 증가했기 때문임**
- **1998~2017년 기간 중 우리나라의 총국민소득(명목금액 기준)은 연평균 6.6% 성장하였으나, 가계소득은 연평균 5.6% 성장하여 총국민소득 증가율보다 1.0%p 낮은 성장률을 보인 반면, 기업소득은 연평균 9.8% 성장하여 총국민소득 증가율보다 3.2%p 높은 성장률을 나타냈음**
  - 외환위기 이후(1998~2007년) 기간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2008~2017년) 기간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총국민소득은 1998~2007년 기간 중 연평균 8.1% 성장하였으나 2008년 이후에는 5.1%로 성장세가 둔화되었음
  - 한편, 외환위기 이후(1998~2007년) 기간 중의 가계소득은 연평균 6.5% 성장한 반면, 기업소득은 연평균 13.6% 성장하여 기업소득의 성장속도가 가계소득에 비해 빨랐음
  - 다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2008~2017년)에는 가계소득과 기업소득의 성장세가 모두 둔화되어 가계소득이 연평균 4.8%, 기업소득은 연평균 5.8% 성장하였음

총조정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기업의 부문별 소득 증가율 추이

〈 총조정처분가능소득 및 부문별 조정처분가능소득 증가율 (1998~2017년) 〉 (단위: %)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총조정처분가능소득	−1.2	9.5	10.4	8.2	10.9	6.3	8.3	4.4	5.4	8.1	6.5	3.9	9.9	5.9	3.8	3.6	3.5	5.2	4.9	5.1
가계	4.4	4.5	6.5	7.6	7.6	7.2	7.7	5.4	5.5	5.2	7.0	4.4	5.7	6.3	4.0	5.1	4.8	5.6	3.7	4.8
기업	−25.0	48.9	10.2	19.0	23.6	2.8	19.1	−4.7	1.8	14.9	14.2	8.7	24.6	5.2	4.6	0.5	1.8	3.9	4.2	3.1

〈 총조정처분가능소득 및 부문별 조정처분가능소득의 연평균 증가율 〉 (단위: %, %p)

구분	1998~2017					
	1998~2007		2008~2017			
총조정처분가능소득	7.9		5.1		6.5	
가계	6.3	(−1.6)	4.9	(−0.2)	5.7	(−0.8)
기업	14.2	(6.3)	6.1	(1.0)	10.3	(3.8)

주: ()은 총국민소득 증가율과의 차이(%p), 총조정처분가능소득 및 가계/기업의 부문별 소득증가율, 연평균 증가율은 명목금액 기준임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 **총조정처분가능소득은 1998~2017년 기간 중 연평균 6.5% 성장하였으나, 가계의 조정처분가능소득은 연평균 5.7% 성장하여 총조정처분가능소득 증가율보다 0.8%p 낮은 성장률을 보인 반면, 기업소득은 연평균 10.3% 성장하여 총조정처분가능소득 증가율보다 3.8%p 높은 성장률을 나타냈음**
  - 외환위기 이후(1998~2007년) 기간 중 총조정처분가능소득은 7.9% 성장하였으나 2008년 이후에는 5.1%로 성장세가 둔화되었음
  - 한편, 외환위기 이후(1998~2007년) 기간 중 가계의 조정처분가능소득은 연평균 6.3% 성장하여 총조정처분가능소득 증가율(7.9%)에 비해 1.6%p 낮았던 반면, 기업은 총조정처분가능소득 증가율에 비해 6.3%p 높은 연평균 14.2%의 성장률을 보였음
  - 다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2008~2017년)에는 가계와 기업의 조정처분가능소득 성장세가 모두 둔화되어 가계의 조정처분가능소득은 연평균 4.9%, 기업은 연평균 6.1% 성장률을 보이고 있음

관련 통계 사이트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OECD National Accounts Statistics(https://data.oecd.org)

종이

국회입법조사처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www.nars.go.kr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표로 보는 이슈」는 입법 및 정책 현안과 관련이 있는 지표를 통해 현상을 진단하고 입법·정책적 개선방안 등 시사점을 모색하는 보고서로 수시 발간되고 있습니다.